

최고조에 이른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의 정상화 방안*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한국경제학회 회장)

1. 서론

세계 역사상 지금 우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의 정부가 지난 10월1일 가동을 멈추었다. 그 후 10일이 지났지만 언제 미국정부가 재가동 될지 알 수 없다. 남유럽 5개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재정과탄으로 실업률이 평균 30%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들의 경제가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우선 미국경제가 살아야 세계경제가 산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지만 경제가 미쳐 회복되기 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무산되어 미국 정부는 당분간 폐쇄됨으로써 이것이 미국경제에 그리고 세계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잘 알 수 없다. 일본도 지난 20년간 저성장과 실업으로 재정이 거덜이 났으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미국이 한 것처럼 엔화를 무진장 찍어내는 일본식 QE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가 동력을 잃었으며 저성장 고실업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야심찬 정책을 펴고자 하나, 경제 사안에 있어 거의 모두,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은 4년을 보내게 되면 우리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립만 원망하고 우리경제가 그대로 가라앉을 수 없다. 재정정책 추진이 현 상황에서 여의치 못하면 금융정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정책 추진도 만만치

* 본 원고는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포럼' 창립식 및 제1차 포럼(2013. 10. 11(금), 국회 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재편집한 것임.

않다. 태생적으로 불안한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 하에서 글로벌 제로금리, 불안한 환율변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정에 달한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를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막연히 자유 시장경제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냉엄한 세계경제 속에서 미아가 될 뿐이다. 불확실성과 싸우려면 한편으로는 시장기능에 기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는 스마트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국정의 성패여부를 책임질 여당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여당이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을 못 얻어 내더라도 경제는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이 필요하다.

2. 최고조에 이른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1) 흔들리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개념적 정의부터 알아보자. 자본주의란 개인의 권리 또는 소유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관점에서 본 정의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의는, 자본주의란 하나의 경제이념으로서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을 개인이나 민간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자유시장에서 얻어진 이윤이 축적되고 재투자되는 것과 비례하여 발전하는 경제체제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정의는 서로 보완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정치적 정의가 먼저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자본주의(capitalism)이라는 단어가 언제,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였는가 학계의 관심이였다. 근대경제학의 아버지이며, 자유방임사상과 자유무역을 주창한, 1776년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의 저자인 Adam Smith(1723-1790)가 아니었으며 공산주의 사상이론을 담은, ‘Communist Manifesto’(1848)과, ‘Das Kapital’(1867)을 쓴 Karl Marx(1818-1883)도 아니었다. ‘Capitalist’라는 단어는 영국인 작가인 Arthur Young(1741-1820)이며, 그가 1792년에 출판한 ‘Travels in France’책에서 ‘capitalist’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Capitalism’이라는 단어는 역시 영국인 작가인 William Makepeace Thackeray(1811-1863)가 1854년 그의 소설 ‘The Newcomes’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시장 자본주의 사상에 첫 번째 타격을 가한 사람은 Karl Marx 이였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란, 자본주의가 지속되면 부유층 부르주아(bourgeoisie)계급에 속하는 소수 사람들이 빈곤층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것은 조만간 두 계급 간 충돌이 생겨 결국 사회주의가 성공하여 부르주아 계급은 몰락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야심차게 예측하였다. 그의 사상은 1917년 볼셰비키(Bolshevik) 혁명으로 시작된 소련이 수용함으로써 공산진영의 선두국

가로 70년을 버티다가 개인사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체제 내 모순 때문에 1989년 소련은 해체되었다.

시장 자본주의가 두 번째 크게 도전 받은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후였다. 미국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여겨지던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50%를 넘어버리자 세계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1883-1946)가 1936년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저서를 출판함으로써 자본주의 사상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멈춘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총수요를 진작시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여전히 견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었다.

역사적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위상을 크게 흔들어 놓은 세 번째 사건은 2008년에 있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미국의 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대형 투자은행이 줄줄이 파산하고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전 은행권에 파산위험을 안겨주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등의 경제 불황은 유럽 남부 5개국에 치명타를 가했다.

2) 약진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중국은 1970년대 말,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30년 조금 지났는데 중국의 경제사정은 엄청나게 좋아졌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실질소득이 매년 10%씩 성장했다. 2012년 중국은 명목 GDP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2.4 trillion 달러로서, 미국의 \$16.6 trillion 달러 다음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물론 12억이 넘는 인구 때문에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9,162달러로 세계 92위로 밀려난다. 그러나 국가별 무역규모를 보면 가공할 만하다. 2012년 총수출은 \$2.02 trillion 달러로 세계 1위이고 총수입은 \$1.78 trillion 달러로 세계 2위이다. 중국의 4대 수출국은 미국(17.2%), 홍콩(15.8%), 일본(7.4%), 그리고 한국(4.3%)이다. 5대 수입국은 일본(9.8%), 한국(9.2%), 미국(7.1%), 독일(5.1%), 그리고 호주(4.3%)이다. 외환보유고도 \$3.3 trillion 달러로 세계 1위이다.

전에는 공산국가였으며 소위 최빈국 그룹에 속했던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노력하여 이제 세계 2위 경제 강국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97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제개방과 경제개혁 때문이었다. 경제개혁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2단계에 걸쳐서 실행되었다. 1단계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기에 진행되었는데, 집단농장 해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기업가의 창업유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은 국가소유물이었다. 2단계 개혁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기간 중에 추진되었다. 국영산업의 민영화, 가격관리제도 폐지, 탈규제, 무역규제완화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5년 민간부문이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었다.

신흥국과 개도국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또는 독재자본주의에 흥미를 가지는데 특히 아프리카의 자원부국들이 국가자본주의에 관심이 많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지원을 받아 서방국보다 훨씬 쉽게 아프리카 자원부국에 접근할 수 있다. 희소자원의 확보 뿐 아니라 양국 간 친선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과 서방의 시장자본주의 모델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국의 경우 거대한 규모의 정부투자 프로젝트와 시장기능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대형투자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절대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다소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자본개방과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1당 국가자본주의의 원천적인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중국경제의 장기발전은 앞으로도 지켜볼 일이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이 우선 서방세계의 금융위기와 례를 같이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커지기만 하는 한국수출의 중국 의존도 때문에 한국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떨쳐버릴 수 없다.

3) 불안정한 달러중심 국제통화제도

1944년 7월 1일부터 3주동안 44개국 우방국에서 총 730명의 대표단이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에 모여 IMF와 World Bank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총 강대국인 미국의 달러 화폐를 국제통화로 하자는 데 모두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것도 달러를 금에 연결시켜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IMF가 중심이 되어 관리되는 고정환율제도였기 때문에 일명 Bretton Woods System의 출범에 모두들 흔쾌히 동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달러 국제통화제도는 1971년까지 잘 굴러갔다.

그러나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면서 달러가 대량 살포되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달러의 금태환성이 의심을 받게 되자 외국인의 달러 기피현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갈파한 미국은 1971년 8월 15일 일방적으로 달러의 금태환성을 금지하였으며 이로써 기존의 고정 환율제도는 막을 내리고 일반변동환율제도(Generalized Floating System)라는 새로운 변동환율제도가 막을 올렸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NAFTA를 결성하여 교역량 확대를 시도하게 되자 유럽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유럽시장을 통합하였으며 자국통화도 포기하고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달러화와 유럽 유로화가 세계의 양대 화폐로 인정받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은 얼마가지 못하였다.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유로화의 국제결제비율은 금방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해져서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믿을만한 나라로 인식되어 세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달러를 국제결제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치저장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향후 오게 될 글로벌 환율위기의 단초가 된다.

과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내의 경제조건과 정치여건에 지우치지 않고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달러가치를 적정수준에 유지하기 보다는 국내 일자리 만들기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미국은 지난 4년간 엄청난 규모의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 QE를 수행해왔다, 만일 흑시라도 미국달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국제금융 질서는 즉시 대혼란을 맞게 된다.

4)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후 폭풍

미국의 QE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비전통적인 통화확대정책이다. 전통적인 통화확대정책은 중앙은행이 성장과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확대를 펼치는 것인데, 이미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통화를 늘여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다. 이 때는 중앙은행이 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장기채권을 대량 사들임으로써 장기금리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동시에 물가 심리를 조금 부추김으로써 오랫동안 작용했던 가격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 사용한다.

미국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QE를 실시하여 왔다. 1차 QE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인 2008년 11월 미국 중앙은행이 \$6000 억 달러어치의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2차 QE는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2011년 6월 말까지, \$6000억 달러의 미 재무성 증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3차 QE는 작년 2012년 12월 시작되었다. 미연준의 12인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1대 1의 압도적 다수로 3차 QE가 결정되었는데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을 가시화하고 실업률이 7% 이하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QE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총 매입규모도 올렸다. 매월 \$450억 달러어치 재무성 증권과 \$400억 달러어치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2013년 연말까지 사들이기로 하였으며 내년 1014년 중반쯤 가서 QE를 종료하더라도 계속 저금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미국이 QE를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8월, 9월 미국 FOMC 회의발표를 전후로 하여,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채권의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채권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미국경제가 빨리 회복 되어야 우리 경제도 좋아질 것인데 회복의 시기는 불확실하다.

5) 일본 Abenomics의 후 폭풍

사실 QE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2000년대 초반에 지독한 디플레 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본 중앙은행은 QE 정책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 3월 19일 일본중앙은행

은 QE정책을 처음 도입하였다. 사실 그해 2월까지만 해도 QE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왕 내친김에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로 하고 4년 동안 \$3000억 달러어치의 국채매입을 시도하였다(기존 시중은행의 밸런스를 5조 엔에서 35조 엔으로 늘였음). 그리고 일본 장기국채 매입의 규모를 3배로 증액하였다. 2010년 10월 일본은행은 대 달러 엔화 약세를 위해 추가로 \$600억 달러어치(5조 엔) 국채와 민간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2011년 일본 경상 GDP가 6조 달러 조금 아래이며 일본정부의 채무는 13.7조 달러로서 230%의 공적채무비율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2012년 12월 새 내각을 책임 맡은 신조 아베(Shinzo Abe) 총리는 일본경제의 확대를 위하여 3개의 Abenomics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공격적인 QE 정책, 사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 그리고 엔화약세를 꾀한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도 일부 Abenomics가 실패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나, 대다수 일본 유권자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일로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아베 총리를 내심 좋아하고 있다. 2013년 2분기에 들어서 엔화는 달러에 비하여 이미 25% 약세를 기록하였다. 1분기 실업률도 전년 동기 4.0%에서 3.7% 수준으로 내려오는 등, 주요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정부 빚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세를 내년 2014년 4월부터 5%에서 8%로 인상하고 이어서 2015년에는 10%로 인상하여 OECD 평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엔 엔화 약세가 별로 반갑지 않다.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고가 상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우리의 중저가 상품 수출과 서비스 분야의 대일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여전히 그래도 경제적 불확실성은 예전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다.

3. 1960-90년대 한국 경제발전의 교훈

1)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의 역할

한국은 1962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까지 압축 성장을 이룸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명목기준이지만, 196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7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32,000 달러가 넘으며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압축 성장기 전반에는 정부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시장제도에 의존하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정부가 앞장서서 지휘하였다. 후반에는 시장기능에 더욱 의존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한국경제를 견인하였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5개년 경제계획전략(5year economic planning strategy)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7 차례에 걸쳐 5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은 1차부터 4차까지 고 박정희 대통령(1917-1979)이 직접 기획하고 리드해나갔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계획은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계획과는 아주 다르다. 계획의 설정부터 다르다. 공산주의 경제계획은 공산당 고위층에서 계획을 설정하여 아래로 내려주어 계획된 목표를 강제로 달성하게 하는 Top-down 방식인 강제계획(mandatory planning)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크게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일단 장기계획이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금융지원, 세제감면 등의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달성하려 하며 국내외 여건이 달라져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목표를 신중적으로 수정하기도 하는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유도계획을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직후 유도계획 방식을 택함으로써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빨리 일으킬 수 있었다. 우리도 7차례 경제계획 기간 중 주로 유도계획 방식을 택함으로써 고도 경제성장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계획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머리, 몸통, 양팔, 양다리의 총 6개 부위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한국의 주요 6개 기관이 경제계획 시스템을 이루며 이들이 각자 맡은 직무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성장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경제계획의 시스템을 이루는 6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머리는 국가 지도자에 해당한다. 국가지도자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병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시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시 신속하게 지침을 내려준다. (2) 몸통은 경제계획을 전담하는 경제부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이 그 직무를 담당하였다. (3) 양팔 중 한 팔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의 박사과 전문가들은 경제계획과 관련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며 고성능 컴퓨터와 고도의 계량경제기법을 사용하여 경제계획의 효과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4) 또 한 팔은 언론에 해당한다. 언론은 경제계획의 목표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여러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그리고 꼭 필요한 새로운 목표를 추가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목표는 미리 제거하도록 건의할 수가 있다. (5) 한 발은 예산지원 부서에 해당한다. 국내저축을 동원하거나 장기차관을 해외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대형 정부투자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 또 한 발은 통계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해당한다. 이 6개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한 개도 없다.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통계가 없이는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을 수가 없다. 통계가 있어야 계획안을 만들 수 있으며 통계가 있어야 국제기구로부터 장기저리차관을 빌려올 수 있다. 통계가 있어야 다른 부처도 그것을 참조하여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고도 성장기의 목표성장률과 실제성장률

5년 단위 경제계획이 7차례 진행되는 동안, 목표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을 서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정권 변동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 계획기간은 1962-1966 인데 5년 평균 목표성장률은 7.1%였으나 실제성장률은 7.8%로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2차 계획기간은 1967-1971인데 5년 평균 목표성장률은 7.0%였으나 실제성장률은 9.6%로서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 하였다. 제3차 (1972-1976)기간의 목표성장률은 제2차 때보다 조금 상향조정된 8.6%였으나 실제성장률은 9.2%로서 역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다. 4차 1977-1981 계획기간에는 목표성장률이 크게 높여진 9.2%였으나 실제성장률은 5.8%로서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2차 세계원유과동, 그리고 1980년 농산물 흉작 때문이었다. 5차 계획기간인 1982-1986 기간의 목표성장률은 다시 낮게 잡혀진 7.6%였으나 실제성장률은 9.8%로 수직상승 하였다. 이 기간에는 물가, 성장, 무역수지 모두 양호하였다. 6차 계획기간 1987-1991 동안에는 목표성장률은 7.3%였으나 실제성장률은 10%로서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하였다. 7차 5개년 계획은 1992년에 시작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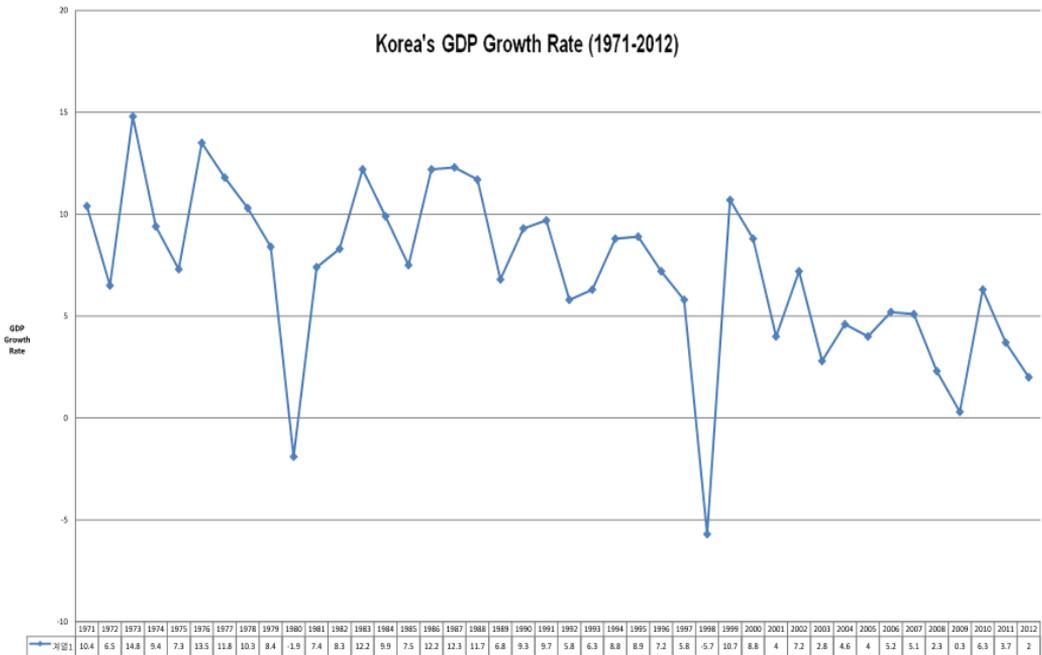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정부체제의 잔재를 걷어내고 민간정부로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전 정부 때 만들어진 7차 계획은 폐기하고 1년을 준비한 후 새로 7차 1993-97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였다. 7차 계획기간의 목표성장률은 7.6%였으나 실제성장률은 9.8%로서 역시 초과달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S 정부 말년부터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결국 아시아 외환위기의 희생물이 되면서 1997년 12월 4일 IMF에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국가적 치욕을 맞게 되었다. 1997년 성장률은 5.8%였으나 1998년에는 -5.7%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때부터 한국의 경쟁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9년 10.7%, 2000년 8.8%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가 싶더니, 2001년 4%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장률은 0.3%를 기록하였다. 그 때를 전환점으로 하여 한국은 낮은 한자리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7차례의 5개년 경제계획을 경험하는 동안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였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보력이 우세한 정부가 대형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성공이 5개년 경제계획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계획의 방법, 시행절차 등은, 1당 정치체제 사회주의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제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생산자원을 국가가 분배하고 모든 생산물을 국가가 배급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경제계획은 비효율의 표본이 된다.

<그림 1>은 1971-2012 기간 동안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 이후부터 한국은 저성장 추세가 현저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2013년 9월 현재의 상황은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의 면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로서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5위이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12위국으로 명실상부하게 G20국가이다. 2012년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32,000수준을 넘었다. 2010년 현재, 무역규모와 관련하여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며 세계 10위 수입국이었다. 2009년에는 한국이 해외원조(ODA)를 받던 날에서 ODA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으며 2008-2009년 지출한 해외원조 총금액은 \$1,7 billion 달러를 넘었다.

<그림 1>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1971-2012)



4. 여야 간 갈등구조를 감안한 경제정상화 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글로벌 불안정 및 불확실성 시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았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달러중심의 국제통화제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도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QE와, 일본의 양적완화 및 Abenomics도 그들이 성공하든 안하든 우리에게 불확실성의 증가로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식자들의 지배적 견해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1) 중장기 적정성장률 달성을 위한 유도계획

우리나라의 국내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간 대립의 골이 깊기 때문에 정책의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실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대립되는 정책 안을 놓고 양당이 연말까지 버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 여유가 다소 있는 중장기 사안은 정치적으로 국민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미리 준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소개된 indicative planning 시스템을 가동하여 해결해 갈 수 있다. 예컨대 3-5년 평균 목표 GDP성장률, 목표 물가상승률, 목표 국가채무비율 등의 중장기 목표 설정은 여당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국정을 리드해 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잠재성장률의 개념이 모호하며 적정성장률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잠재성장률의 원래 의미는 자본, 노동, 기술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추정된 성장률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추정하기가 어렵다보니 중장기 추이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추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계적 편기(Statistical bias)가 있게 마련이다. 적정성장률은 거시경제방정식에 입각하여 목표무역수지, 목표인플레이션, 목표통화공급률을 감안한 성장률이 된다.

2) 경제 안정화 방안

(1) 환율 타기팅

환율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수출입 업자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변수이다. 지금은 우리의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100%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환율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면 목표환율을 설정해야 한다. 중장기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환율을 범위기준으로 타기팅(range targeting) 하고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 지수를 활용하여 현재 환율이 지수 환율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결정한다.

환율 타기팅을 하면 외환투기가 더 극성을 부린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예컨대, 목표환율범위를 일단 정해 놓으면, 실제환율이 어느 쪽이든 한계선 수준에 가까이 가면 환 투기꾼들은 외환당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대량의 환투기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율의 제2 목표범위를 정해 놓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록 실제환율이 제1 목표범위를 넘어서도 제2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곧 다시 제1범위 내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면 외환시장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2) 적정인플레이 타기팅

적정 성장률 타기팅과 함께 적정 인플레이 타기팅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개가 결정되면 적정 통화공급률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일단 인플레이 타기팅을 선언하고 발표하면 그자

체로서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

거시경제 장기균형 방정식은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y = MV \quad (1)$$

(1)식의 변동율을 적용하면 (2)식이 유도된다.

$$\% \Delta P + \% \Delta y = \% \Delta M + \% \Delta V \quad (2)$$

(2)식에 근거하여 (3)식이 유도된다.

$$\text{인플레이율} + \text{성장률} = \text{통화공급률} + \text{유통속도 변동률} \quad (3)$$

여기서 이론적으로 유도된 것을 실제에 적용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6개월 기준 또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상기 방정식 결과를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2-3년 평균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세계 역사상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팽배한 적이 드물다.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의료보험 개혁안을 지금 야당인 공화당이 부결함으로써 미국정부의 창구가 일시 폐쇄되었다. 한편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주의는 오히려 빛을 내고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는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불리하다. 지난 10 여 년 간 산업경쟁력이 꾸준히 약화되어 왔으며 몇 개의 대기업 이외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야심찬 정책을 펴고자 하나 경제회복이 느리고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 경제엔진에 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야 간의 대립이 새 정부 초반부터 강경하여 민생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결 국면이 누그러지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이 필요하다. 시장기능에도 의존하는 한편 정부의 스마트한 개입을 유도하는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

개별 기업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고 정보는 넘쳐흐르는 시대에 쉽게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성이 높

은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정당화된다. 이 때, 새로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규제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안내하는 경제 관제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 관제탑의 설치와 기능 강화는 여야 대립 관계없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과거 60-7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계획 전략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비합리적 대처방안이다. 하지만 지금 고도의 불확실시대에 모든 것을 막연히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무지한 조치이다.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되 불확실성과 외부불경제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정부당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